

전주시의회 의원 8명, 5분 발언 이어가

전주형 기본소득 도입 ·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 복지정책 전환 · 농민 지원 확대 등 제시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진안군과 신안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가까운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살릴수 있는 전주형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남동 광장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상습 주취와 소란 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당이나 시설 입소 유도를 넘어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을 통한 최소한의 질서

와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은 기후위기를 환경 문제가 아닌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주시 복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기후위기는 소득과 주거 환경에 따라 피해가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주시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준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지원을 결합한 '기후복지 정책'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은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농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해 농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전주시 도입을 미루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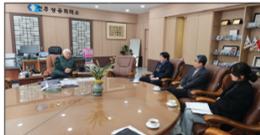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공간 재편에서 통합이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시는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통합을 전제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공동 이용되며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 성장 전략과 도시 노선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전주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당 채무가 올해 112만원으로 급증했고, 부채 증가 속도가 예산 증가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며 "부채 이자 상환액이 세입 증가분을 초과해 재정 운용이 한계에 다다랐고,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방편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처방이 아닌 구조적 재정개혁과 명확한 채무 관리 계획

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삼천1·2·3, 효자동)은 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시설 공사 과정과 관련해 계약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공사 수행 과정과 이후 계약 체결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 이후 고발과 징계 절차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대됐고, 법적 판단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전주시의 도시 브랜드 전략 부재를 문제 삼으며 난립한 캐리더 정비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부서별 캐리더 난립으로 정체성이 흐려지고 저작권 미확보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캐리더 전략 수립 마련을 제안했다.



중요하다"며 "오늘 들은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행정 추진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완산구, 현장 중심 소통 행보 이어가

국승철 구청장,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국승철)는 전주지역건축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 및 완산구지회, 전주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구청장은 각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현안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건축·부동산·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전주시, 겨울철 교통 안전 위한 도로 열선 확충

전주시가 겨울철 폭설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빙 취약구간 도로에 눈과 얼음을 신속하게 녹이는 열선을 확충하고 있다.

시는 겨울철 강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결빙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고 위험이 큰 급경사로와 교차로, 보행로, 학교 인접 통로 등 상습 결빙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도로열선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차량 미끄럼 사고와 보행자 낙상 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 사

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힐스테이트 열선 설치사업(2억 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시는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14억1000만 원을 투입해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절기 이전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열선이 설치되면 기온 저하 시 자동으로 작동해 노면에 쌓인 눈과 얼음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결빙 작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및 야간에도 안정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재설 시 열화물질 사용을 줄여 도로시설물 부식과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등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인 효과가 기대된다.

권희성 기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동

전주시, '시민불편 제로화' 위해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

전주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편 사항을 찾아내 신속히 해결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도심 영역 확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증가, 도심 공동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생활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민원 전담 조직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민원 처리 절차 및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우물기 전주시장도 최근 간부회의를 통

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출범과 맞춰 생활민원 대응을 '현장'으로 전환해 선제 점검, 신속 처리,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총 3명(행정 6급 1명, 7급 2명)으로 구성되며, △생활민원 선제 대응 △접수 민원 사후관리 △생활민원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별 민원과 행사·축제와 같이 특정 수요가 발생하



전주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편 사항을 찾아내 신속히 해결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는 시기별 민원, 다빈도 발생 민원(도로, 교통, 청소 등)에 대해 월별 현장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불편 제로화'를 목표로 시민의 안전 및 불편 사항과 직결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불편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조치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민원 선제 발굴 및 신속 처리 △처리결과 점검·사후관리 강화 △부서 간 총괄조정으로 복합민원 대응 속도 향상 △민복·상습 민원 차단 등 시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 가져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삼)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임직원 한마음 한 뜻,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부서별 연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이날 말까지 임원과 부서장, 부서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사업 현황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순회' 방식의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순한 업무보고를 넘어 각 부서의 핵심 역할과 중점 추진 과제를 공유하고 2026년 공단 운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보고회의 초점이 맞춰졌다.

△부서 캐치프레이즈 △2026년 중점



사업 추진 방향 △AI·디지털 기반 사업 △부서 현안업무 및 수지를 향상 방안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2026년 전주시 시장 운영 방향과 발맞춰 AI·디지털 사업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공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의지가 강조됐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옮겨가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